

사회

재정자립 9% 강진군의 기막힌 예산 집행

퇴직자들에 20돈 순금메달 선물

올해 9명 등 4년간 1억4천여만원 들어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비를 줄이는 등 경비절감에 전력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퇴직 공무원들에게 고가의 순금 기념메달(사진)을 선물하는 호화 선심행정을 펴 물의를 빚고 있다.

만 원에 이르는 '퇴임 금메달'을 전달했다. 강진군은 지난 2008년도에 똑같은 방법으로 16명의 퇴직자에게 준 순금 기념메달 제작비로 총 5천25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06년에는 1천80만 원, 2007년에는 4천800만 원 같은 용도로 지출하는 등 퇴직공무원에 대한 순금 기념메달 전달은 지난 2006년부터 4년째 이어졌다.



사이 군이 수년째 많은 예산을 들여 퇴직 공무원들에게 호사스런 선물을 주었다니 허탈감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강진군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들이 수십 년 동안 공직에서 일한 노고를 위로한다는 의미로 오래 기억될 만한 기념품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해 온 일"이라고 설명했다.

만 원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액 반납했다. 나주시는 2009년 퇴직한 4급 서기관 1명에게 산업시찰 여비 명목으로 단 13만 원을 지급했으며, 장성군은 5급 사무관 1명에게 산업시찰 여비로 7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선 이후 행정안전부의 '공로연수지침'에 의해 퇴직공무원에 대한 처우(사기)방안으로 연수에 필요한 경비(교육비, 교재비, 훈련비)나 연수기간 중 개인회고록을 낼 경우에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희망근로 노인들이 월 20만원씩 기부?

근로일수 조작 부당집행 남구청 공무원 적발

정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급여 중 일부가 기부금 명목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희망근로 참가자들의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뒤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남구청 소속 공무원 강모(52·6급)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붙여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참가 근로자 급여 4~5명씩 2개 조로 나눠 한 달 평균 10일~15일가량 일했음에도 매일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강씨가 노인들에게 지급한 급여 90만 원 중 20만 원씩, 모두 1천100만 원을 남구 한 복지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포착, 기부금 성격과 강제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에서 "기부금을 낸 것은 사실인데,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다. 다만 기부금 전달처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충식 해남군수 직위 유지

법원, 벌금 80만원 선고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3부(재판장 윤강열)는 20일 '군민의 날' 행사에서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충식 해남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지 않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미쓰비시 유령집회 규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대표 김희용) 회원들이 2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앞에서 미쓰비시 전시장 측의 집회신고 선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날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유령 집회 신고로 지난해 9월 시작된 1인 시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말서 거부해도 징계사유 안된다

대법 "양심의 자유 침해"

직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의 시말서(始末書)를 쓰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업무명령이어서 거부해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시말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회사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을 인용했다. /연습뉴스

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회사규정이 있어도,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 경위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업무상 정당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공천 대가 3억원 씩 건넨 혐의

전·현직 도의원 2명 영장기각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성준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공천 대가로 수억원의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현직 도의원 Y씨와 전직 도의원 P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날 Y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Y씨 등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공천(비례)을 받기 위해 공천권을 행사하는 모 인사에게 각각 3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전날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으로 돈을 받은 인사 등에 대한 후속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 연탄불 갈던 50대 숨져

20일 오후 5시10분께 여주시 광무동 유모(58)씨의 단독주택 보일러실에서 유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 박모(여·74)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현장에는 연탄재와 집게가 남아있는 등 연탄불을 갈았던 흔적이 발견됐다. 유씨는 2년 전 어머니가 사망한 뒤 이 집에서 혼자 거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kwangju.co.kr

주차장에 있는 돈 슬쩍하다 '들롱'

○광주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주차장에 떨어져 있던 5만원권 지폐 8장을 슬쩍했다가 CCTV에 흔적이 남는 바람에 1시간여 만에 '들롱'. ○광주동부경찰은 20일 광주 모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김모(42)씨를 접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불붙여 조사중. ○김씨는 전날 오후 3시에 광주시 동구 대인동 모 빌딩 주차장에서 서모(여·36)씨가 차에서 내리다 흘린 현금 40만원을 가져간 혐의. ○서씨는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서 김씨가 돈을 주워가는 장면을 확인했는데, 김씨는 경찰에서 "돈은 이미 돌려주고 합의를 했다"는 등 횡설수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무안 현경면 해상서

석화채취 70대 숨져

20일 오후 4시10분께 무안군 현경면 해상에서 석화를 채취하기 위해 바다로 나갔던 윤모(여·70)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해경이 발견해 인양했다. 윤씨는 이날 오전 10시에 석화를 따라 나갔다가 귀가하지 않아 마을 주민들에 의해 실종신고 됐다. 해경은 바다에 낚인 채로 해무로 인해 윤씨가 길을 잃었거나 실족해 바다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진도 앞바다 50대 선원

조업중 그물에 깔려 숨져

지난 19일 밤 10시께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獨巨島) 동쪽 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진도 선적 7급 연안자망 어선 '굴지호'(선장 선모씨·42) 선원 박모(51·경북 칠곡군)씨가 동료 선원 1명과 새우잡이 그물을 걸어 올리다 그물에 깔려 숨졌다. 해경은 "과도에 어선이 크게 출렁이면서 걸어들린 새우잡이 그물에 박씨가 깔렸다"는 동료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Sungnam' (성남)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holding a large, round object, possibly a fruit or a gift, with text in Korean describing the product and company information.